

새정치도 여성 후보 30% 공천할까

당현·당규 마련 앞두고

민주당 규정 유지 촉각

26일 출범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당현·당규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역 의원 여성 후보 30% 의무 공천 규정이 담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민주당 당헌에는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자치단체장 후보자 제외)'에 있어서 여성 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 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여성 의무공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광역의원 도전에 나서고

있는 여성 입지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당현·당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혜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선출직 지방의원 여성 30% 의무공천 실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를 표방한데다 기초의원 무공천에 따라 당현에 광역의원 여성 30% 의무공천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 여성 30% 의무공천이 현실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호남은 가능하지만 새누리당과 맞붙는 전국 단위의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여성 30% 의무공천을 실시한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당장, 광주시의원의 경우, 최소 6명의 여성

후보자를 공천해야 하고 전남도의원의 경우, 농어촌 지역은 예외는 있겠지만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성 후보 공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일률적인 여성 공천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기반으로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당현에 광역의원 여성 공천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성으로 규정하고 세부규정인 당규에는 '1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이상과 현실 정치에서의 경쟁력을 잘 조합해야 한다"며 "무조껀적인 할당 공천보다는 여성 후보에 가산점을 더 주는 방식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安, 민주 중진들과 회동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오찬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박병석 의원, 안 중앙운영위원장, 김영환, 김성곤, 이미경, 문희상, 이석현 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 출마 현직 국회의원 사퇴 '법의 사각'

사직서 접수하고 예비후보 등록…후보·국회의원 이중적 지위 가능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 도전을 위해 국회의원 사퇴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승용 의원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주승용 의원이다. 이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가장 먼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중앙당의 민주로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못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기득권의 포기를 통한 진정성을 보여 여론의 향배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

지 않을 경우 경선이 끝난 뒤 다시 의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항상 선거 때면 되면 불거지고 있고, 그 원인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이 서로 규정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3호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국회의원 사직

원 접수증만 제출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사퇴서가 수리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의원직 사퇴를 규정하는 국회법 135조 1항은 '국회는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직 국회의원이 사퇴서 접수증을 첨부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회는 그 사퇴 결정을 미룰 경우 그 후보자는 공직선거 후보로서의 지위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아주 기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현행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로 등록하면 당연 사직된다'고 개정하거나,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면 당연 사직된다' 등으로 개정하면 더 이상의 혼선은 없다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전화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각회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 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公 告

利川徐氏 尚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尚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